

전북교육인권조례 놓고 갈등

전교조 전북 “교권보호대책 빠져” VS 도교육청 “사실 아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옥진)는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보호 대책이 빠져있는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옥진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례는 교권 전문가가 만든 것도 아니다. 학생인권 업무를 하던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 학생인권센터는 교육인권센터로 간판을 바꿔달며 교권보호업무를 가져갔고, 그 바탕에 ‘교원자유지원센터’가 다른 센터 밑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특히 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은 은연중에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이는 교육부 정책과도 완전히 엇박자다면서, 교육부가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서 시도 교원자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

이어 교육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전교조가 애써 만들어놓은 ‘교원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이런 행위가 발생한 경우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내용과 함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행정업무 경감 등의 내용까지 담아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알려진 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더 보완·발전시키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하고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교육인권조례만 들면 그건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대책이 빠져있는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는 관계기관의 반응으로 개정 작업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정말 교권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며 되물기도 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상담인력 확충, 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구체적인 교권보호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교육청은 그저 조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

송 지부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실질적 교권 보장 논의는 뒤로 미룬 채 기존 교권센터 마저 허물고 영등항 학생인권센터 손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을 규탄했다.

이울러 전북교육청의 이런 행태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원단체가 오히려 교육청을 감싸고 있음에 유

“교권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라 교육부 방안 따라 독립적인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립을”

도교육청 “교원침해로부터 안전한 활동 보호 조례 유지 교육활동보호 혁신 TF 구축 침해 예방 대책 논의 시작”

감을 표했다. 끝으로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교육부 방안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립 하라고 요구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최근 송옥진 지부장전교조 전북지부가 도내 교사들에게 30페이지 쪽지를 통해 보낸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허점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21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배포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원자유지원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전 운영했다.

기존 교원인사과 소관 교원자유센터는 2023년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관돼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은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교원자유센터 웹사이트 주소는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1교원당 10회 법률자문 비용을 지원하고, 자문 변호사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 또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

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이 소송을 당할 경우, 민사 건당 2억, 형사 건당 5천만원 등 연간 총 15억 한도 내에서 보상을 준다는 것. 세번째로,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 ‘시도교원자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후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교육부의 추진사항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말로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교육활동보호’를 담당한다고 했다.

현재 제정 추진중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24조 2항에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해행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 등 조례 제24조 3항에서 인권담당관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원자유법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심의 후 학교의 장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교원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언급한 ‘교육활동보호조례’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물고 싶다고 했다.

이미 제정?운영중인 ‘교육활동보호 조례’와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3월 ‘교육활동보호 혁신 TF’를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 혁신 TF’는 교장?교감?교사 등 8명으로 구성,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분석’ *타시도 우수사례 분석 *해외사례 분석 *현장 교원 대상 설문 조사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교육활동보호 혁신 TF’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은 교육단체, 현장 교직원 등과 협력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기자

디지털 도구 활용 독서토론 ‘눈길’

도내 중학생 대상

도교육청, 내달 8일

15일 · 22일 진행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독서토론이 눈길을 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4월 8일과 15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2023년 디지털 기반 융합형 독서토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독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민성·미디어 문해력·디지털 공감력 등 디지털 분야의 역량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더불어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실천으로서의 독서토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1회차(대면)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그림책 비경쟁 독서토론을 진행하고, 2회차(대면)는 청소년 소설로 질문을 만들어 AI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E-Book을 제작한다. 마지막 3회차(비대면)는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메타버스에서 독서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 기반 융합형 독서토론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각 학교 지도교사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학교별로 2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학생에게는 도서를 발송한다.

이시기 문예체육과과정은 “미래교육을 향한 디지털 기반 독서토론 교육 운영으로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의식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정은성 기자

교육공무직 상담지원제도 연중 상시 운영

도교육청, 심리·정서적 안정 돕기 위해... 직장 내 갈등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

개인상담 1인당 연간 10회까지 · 집단상담 1팀당 연간 4회까지 예산 범위 내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교육공무직원 상담지원 제도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노동자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 교육공무직원 상담지원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안내했다.

이는 개인 문제·업무 부적응·조직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다양한 상담창구를 제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사전예방 차원의 상담도

지원해 중도 퇴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담내용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를 비롯해 직장 내 갈등,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상담유형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2가지로 진행되며,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개인상담은 상담·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직원이 직접 상담(치료) 기관에 신청한 뒤 기관에 방문해 상담·치료를 받으면 된다. 또 집단상담은 구성원 간 갈등조정이 필요한 그룹으로,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 공문으로 신

청하면 업무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 준다.

한편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 집단상담은 1팀당 연간 4회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화정 노사협력과장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이라면 누구나 익명성을 보장받고 상담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상담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나 조직 내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구성원 간 소통·협력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교육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지원

도교육청, 공·사립 15곳 ‘행복안심유치원’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공·사립유치원 총 15개원을 2023 행복안심유치원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안심유치원’은 건강·안전 관리에 대한 유치원 책임 강화를 통해 유아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전북교육청의 공·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행복안심유치원을 운영,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으

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명을 ‘행복안심유치원’으로 변경했다.

행복안심유치원에 선정되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교육부의 유치원 평가 ‘건강·안전’ 영역 지표를 활용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보다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박수미 유아교육과정담당 장학관은 “유아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니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유치원 안전 관리에 힘을 쏟겠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부모교육

강사단 29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부모교육 강사 인력풀을 새롭게 구성·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강사단을 구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독서교육, 진로진학, 학습습도 등 기본적인 학부모교육부터 미디어리터러시, 감정코칭, 안전교육, 자녀이해 및 소통까지 다양하다.

학부모교육 강사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29일까지 강사 지원서 등을 작성해 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담당자 이메일(greamp@jedu.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서면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빛 이용 스마트 광결정 형광 소재 개발

전북대 구자현 대학원생



특징을 갖는다. 추가적으로 460nm 빛을 이용한 광증합을 통해 제어된 상태를 그대로 고분자화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개발한

전북대학교 구자현 대학원생이 빛을 이용한 간단한 공정으로 스마트 광결정 형광 소재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소재는 자외선 노출 시간에 따라 반사파장 및 원편광 형광 특성이 제어되며, 추가로 광증합까지 가능해 첨단 광학필터나 고차원 보안 필름 등으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광학 및 재료과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옵티컬 머티리얼즈(Advanced Optical Materials IF=10.050)’의 2023년 3월 17일자 표지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연구팀은 광이성질화(光異性化)가 가능한 응집유도발광 액정 분자를 합성하고 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나 광학필터 등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인 ‘폴레스테릭 액정’ 혼합물을 제안했다.

이 혼합물은 전단 코팅이 쉽고, 유도된 광결정 특성은 자외선 조사 시 광이성질화에 의해 그 특성이 변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추가적으로 460nm 빛을 이용한 광증합을 통해 제어된 상태를 그대로 고분자화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개발한

소재를 이용해 다중 광학 정보 저장 시스템 및 신개념 위조방지코드를 실증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연구는 광이성질화와 광증합 과정을 독립화해 고차원 다기능 광결정 소재를 개발한 것으로, 고차원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구자현 박사과정생은 “빛을 이용한 간단한 공정을 통해 얻어진 고차원의 광학 소재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연구가 첨단 광학 필터, 복합화보안 필름 등으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학 및 소재 분야에 널리 이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책보원이 주관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학생 복지를 위한 양오봉 총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이 사업 선정으로 전북대는 올 한해 1만2,400명의 학생에게 1,000원에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정은성기자

이에 따라 전북대는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24일 동안 매일 아침 1,000원에 조식을 제공한다. 한 끼 당 4,500원 기준으로 학생 1,000원, 정부 1,000원, 대학 2,500원 등을 투입해 하루 100명의 학생에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사업을 위해 전북대는 학생과 주관으로 총동참회와 발전지원재단, 생활협동조합 등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